

민주연구원 '국민의힘 지방정부 평가 핸드북' 발간

-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(원장 이재영)은 2월 3일(화), 『국민의힘 지방정부 평가 핸드북』을 발간했다.
- 핸드북은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거 3년 반 동안의 지방정부 경제 및 민생 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며, 지난 19일 서울을 시작으로, 부산, 대전, 인천, 울산 등 총 11개 지역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취합했다.
 - 11개 지역 : 서울, 부산, 인천, 대전, 울산, 충남, 세종, 충북, 경남, 경북, 강원
 - 이재영 원장은 11개 지방정부에 대해 “대부분 실질적 성과가 부족했고, 정책 실패, 공약 파기, 내란 옹호 발언 및 실언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”며 총평했다.
- 핸드북은 민주연구원, 서울시청, 여의도연구원 간 불거진 서울시 주택 공급 부족 논쟁 과정을 고스란히 담았다.
 - 민주연구원은 지난 1월 19일 “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전후 52개월을 비교하며 서울의 주택 인허가 감소율이 -13.9%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점”을 지적했다,
 - 이에 서울시청은 “전세사기 이슈가 컸던 2022~2023년 비아파트인 다세대주택 급감이 원인”이라며 설명자료로 반박했다.
 - 여의도연구원은 1월 27일, “시민과 함께 일군 서울 발전의 성과” 보고서를 통해 “공급 절벽은 문재인 전 대통령,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멈춰버린 10년의 기록”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,
 - 이에 민주연구원은 “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서울과 비슷한 경기, 인천의 인허가 감소율보다 서울이 5.6배 더 큰 점”을 지적하며, 오세훈 시장의 주택 공급 실적에 대해 의문

을 제기했다.

○ 핸드북은 언론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지방정부의 실정을 꼼꼼하게 다뤘다.

- 민주연구원은 부산이 특·광역시 중 처음으로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했고, 부산 임금노동자의 5년간 소득증가율이 3.47%로 전국 12위인 점, 1인당 지역총생산이 16위로 전국 최하인 현황을 지적했다. 이어 민주연구원은 어반루프 공약 실종, 구덕 재개발 사업 부진, 부울경메가시티 파기 등 부산시정의 실패 사례를 설명했다.
- 대전의 경우, 이장우 대전시장 취임 이후 효과성이 좋던 온통대전 폐지, 대전이슈 슬로건 교체, 시민사회 중간지원조직 폐쇄 등의 문제점을 꼬집었다.
- 민주연구원은 박완수 경남지사에 대해서도 낙하산 인사 문제,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거부, 2027년 완공예정이었던 남부내륙철도 미착공, 대규모 청년이탈에 대한 대책 부족 등의 정책실패 사례를 열거했다.

○ 민주연구원의 평가 핸드북은 전반적으로 국민의힘과 정책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지방선거의 전초전 역할을 했다는 평이다.

- 민주연구원은 강원도정에 대해 “정치·인사 논란으로 명태균 개입 공천 의혹과 강원연구원의 업무추진비 부정 및 특혜 인사, 1948년 건국 발언 등으로 갈등이 확산됐다”고 주장했고,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도정의 성과를 폄훼하는 정치적 공세라고 비판했다.
- 충청남도의 경우에도, 민주연구원은 행정통합 추진 과정, 재난 대응, 도정 운영 태도, 도내 격차 심화, 농어촌 정책, 인사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짚으며 김 지사의 4년 도정을 전방위적으로 비판했는데,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과거 민주당 도정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김태흠 지사의 투자유치 성과를 설명했다.
- 이외 지역의 경우에도 민주연구원이 실정을 지적하고, 국민의힘 지역 시도당이 이를 반박하는 등의 정책 논쟁이 이어졌다.

○ 민주연구원 채은동 부연구위원은 “국민의힘 지방정부 평가 핸드북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정과 도정을 검토하는 장을 마련한 점”을 평가하며 “지역 일꾼을 선택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”이라고 덧붙였다.